

새천년 정보지식시대를 위한 미국 국무부의 新과학기술 외교정책

최영식(STEPI 책임연구원, 정치외교학 박사)

본 고에서는 지난 5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외교정책 강화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 배경

1990년대 후반 미행정부와 의회가 잇달아 미래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자 이를 기초로 미국 국무부는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외교정책의 수립에 착수했다. 1999년 미국 의회는 과학기술 외교 전반에 관해 국무장관을 보좌하는 과학기술자문관(S&T Adviser)의 임명에 관한 입법을 예고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1999년 10월 미국무부장관은 Global Affairs담당 차관 및 군수통제·국제안보(ACIS)담당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한 “미국무부의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고위급 Task Force”를 발족시켰다. 2000년 3월 본 Task Force에 의한 최종보고서가 미국무장관에게 제출되었다.

II. 미국무부의 과학기술 외교역량의 강화 정책

미국무부의 과학기술 외교역량 강화정책의 핵심요소는 첫째, 미국무부의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주도권 확보 둘째, 과학기술 외교관련 체제의 개편 셋째, 과학기술 외교정책의 조정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1. 미국무부의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주도권 확보

국무장관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이슈를 대외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 틀(Policy Framework)을 구축함으로써 국무부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정책담화문을 통해 천명해야 한다.

2. 국무부 과학기술관련 체제의 확대 개편

과학기술 외교체제의 강화를 위해 첫째, 고위급 과학기술자문관의 영입 둘째, 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Scientific Affairs)내에 폐지된 과학과(Science Directorate)의 복원 셋째, 모든 부

차관보실에 과학기술담당관을 위촉해야 한다. 또한 과학과 내에 우주첨단기술실(SATO) 과학기술협력실(STCO), 전염병실(Emerging Infectious Diseases Office)을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 외교정책 수립에 대한 과학과의 주도적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1) 과학기술자문관(Science and Technology Adviser)

국무장관을 직접 보좌하는 과학기술자문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국무부 고위실무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문관은 과학기술 외교담당관으로 구성된 부차관보급의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나아가 과학기술자문관은 대외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과학기술 외교이슈에 관해 정책자문을 한다. 그는 또한 국무부를 대표해서 국내외 과학기술계와 주요 과학기술 외교이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나아가 과학기술자문관은 국무부 대변자로서 과학기술 외교이슈에 관해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같은 고위급 정책결정기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그는 국무부내의 여타 자문기구들(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dvisory Board 및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과 협조하여 과학기술 외교정책에 관한 조정역할(Coordination)을 수행한다.

특히, 과학기술관은 주요 과학기술 외교현안에 대해 매년 서너 차례 국무고위관리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자문관은 현재 국무부가 검토중인 해외과학관 개편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건의한다.

끝으로 과학기술자문관은 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의 과학과로부터 스텝을 지원 받으며 또한 주요 과학기술 외교이슈에 대해서는 Global Affairs 차관실과 군사통제·국제안보 차관실로부터 전문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 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내 과학과의 복원

1997년 폐지되었던 과학과(Science Directorate)를 복원하여 제1부 차관보급을 과장으로 임명하고 3실(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pace and Advanced Technolog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Office)을 신설·보강한다. 과학과 과장은 과학기술자문관, 국무부내의 과학기술 관계부서장 그리고 타 부처의 관계부서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자문관과 함께 과학기술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 기업계, 의회, 관계부처 및 비정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과학과 과장은 관계부처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정책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긴밀한 정책조정을 통해 관계부처들의 대외협력 관계(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 등)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제과학기술협력 활동을 촉진한다.

3. 과학기술 외교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국무부는 과학기술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계 및 학계와도 과학기술 외교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결성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국무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과학기술계의 자원을 동원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국무부는 국무부관리들의 과학기술 외교이슈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관 인사정책에 대한 조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자문관과 과학과 과장의 리더십 하에 과학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의 구축은 국무부의 최우선 정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조체제를 통해 국무부는 고위 관리들의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의 라운드테이블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부는 과학기술계와 보다 효율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해 국무부 '정보기술 5개년 계획'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국무부는 정보기술역량의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계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관계부처들과도 과학기술 외교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국무부는 이를 위한 일환으로 과학우주센터, 환경과학기술담당관들간의 데이터네트워크의 개선을 위한 시험사업(pilot project)을 구상 중이다.

4. 국무부의 과학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국무부는 과학기술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대외업무의 과학문맹률(science illiteracy)을 낮추기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둘째, 과학담당관으로서의 경력 쌓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셋째, 과학기술전문가의 영입 강화 넷째, 관계부처, 학계, 기업계 그리고 국무부내의 외교담당직으로부터 과학기술전문가들을 폭넓게 활용 할 것이다.

1) 교육 훈련

외교관연수원(FSI: Foreign Service Institute)에서는 외교관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훈련 강화의 목적은 모든 국무부 관리들(외교관, 행정관, 고위급 실무자 등)의 과학기술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작에 있다. 나아가 국무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외교관들이 언

제 과학적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자문을 구해서 취사·선택·활용하는지에 대한 훈련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FSI에서는 외교관 및 행정관리들에게 환경과학기술(EST)에 관련된 여섯 과목을 제공하고, EST 담당관에게는 한가지 필수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외교관 연수과목(약 20과목)에 환경과학기술 분야(module)를 삽입토록 하고 있다. 1999년부터 FSI는 이미 현지채용 외교관(FSNs: Foreign Service National Employees)에게도 환경과학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밖의 FSI이니셔티브들을 보면 첫째, 미국립과학한림원(NAS) 보고서를 외교관연수 및 고위급 관리세미나의 필수교재로 활용 둘째, FSI교과과정의 토론회 및 발표회에 과학전문성(AAA연구원, Foster연구원, 기타 주요부서의 위촉과학자들 등)의 적극 활용 셋째, OES의 제1부차관보가 중급외교관 학급을 관장케하고, FSI 연수생들에게 과학기술 외교정책 결정자들과의 정규적인 접촉기회를 권장 넷째, OES 고위관리와 FSI 학과장이 함께 과학기술분야를 연수과목에 삽입하는 방안과 과학기술 단과반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국무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성패가 과학계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달려있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니셔티브도 아울러 고려 중이다: 첫째, 세계적 과학자 및 과학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의 개최를 통한 국무부 고위관리들의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외교이슈에 대한 orientation 증대 둘째, 국립보건원(NIH)과 합동으로 세계적 보건이슈에 대한 시험적 포럼(a pilot one-day Forum)의 개최 셋째, 사례연구 등의 교육훈련수단을 FSI교과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AAAS 연구원을 국무부 정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 승진 인센티브

국무부는 과학기술 외교와 지구적 차원의 실무경험을 국무부의 기본 임무로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관 인사(정치, 행정, 경제, 영사담당관)를 관장하는 승진심사위원회(promotion boards)는 과학기술 외교 경험을 승진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을 고려 중이다.

Global Affairs국과 군수통제·국제안보국은 해외과학기술 외교담당관을 추천하고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의 확보와 담당업무에 대해서 지역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시험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서 2년간 국내와 해외를 번갈아 맡는 업무순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담당부서는 과학기술 외교직의 폐지 또는 업무조정에 관해 정책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과학기술 및 지구적 분야를 전담하는 외교관에 대한 승진기회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이니셔티브로서 첫째, Global Affairs국과 군수통제·국제안보국의 주요 업무가 과학기술 외교관의 승진에 유리한 기술(skills), 역량, 경험을 보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고 둘째, 승진심사과정에 Global Affairs국과 군수통제·국제안보국 고위관리의 참여시키고 셋째, Global Affairs국과 군수통제·국제안보국을 위한 website를 별도로 개설하여 해당 부서의 홍보(주요 활동, 구직정보, 승진기회에 관한 정보 등)의 場으로 활용할 것이다.

3) 리쿠르트

국무부는 과학기술이슈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부 인사채용서류에 과학기술 외교이슈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특히, 대학의 과학기술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리쿠르트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임시 전문직

국무부는 관계부처에 임시 전문직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당 부처로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무부 관리가 전문부서에서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는 물론 관계부처간의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무부는 또한 학계 및 기업계에도 임시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국무부는 AAAS 연구원들을 국무부 임시외교관으로 채용함으로써 국무부의 과학기술 외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부는 관계부처의 관리들을 해외과학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인도의 수도 New Delhi에 복원되는 과학관직에 관계부처의 실무자를 파견할 예정이다.

III.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국무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외교정책과 연계하려는 이러한 특단의 정책적 조치는 정보지식의 새 시대를 과학기술입국을 통해 열어가려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외교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같은 미국무부의 새로운 과학기술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는 21세기 과학기술시대의 대외협력을 주도해야 할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가 과학기술 외교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외교정책의 종합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외교통상부 자체의 과학기술역량(Science and Technology Competence)의 강화일 것이다. 그

러나 이보다 우선 되어야 할 과제는 외교통산부가 관계부처들의 과학기술 외교역량의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